

국민분노 극치에 달해 탄핵 시나리오 구체화 이르면 6일 새벽 표결

‘실패극’으로 돌아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 혹은 탄핵 시나리오가 구체화되고 시점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갖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는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야6당尹 탄핵소추안 제출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4일 오후 2시40분에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5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할 예정이다. 빠르면 6일 새벽에도 표결은 가능하다.

야6당,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국회 재적의원 200명 찬성표 필요 통과 위해 국민의힘 8명 찬성해야 헌법재판관 9명 중 현재 6명 ‘변수’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위헌적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와 헌법수호책무 위반 ▲위헌적 계엄령 및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인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대의민주주의,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 또는 위반 ▲불법 준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의원의 표결권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 의무 위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 의무 위반 ▲계엄법 위반 및 형법상 내란미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위법적인 계엄과 그 과정에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주말을 넘기면 국민들이 어디를 향해 촛불을 들지 알게 될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할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각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치권이 해결해야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마음”이라며 “단 1분이라도 빨리 ‘동작그만’시키는 것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계엄 해제 찬성 18명, 탄핵도 찬성 표 던질까

대통령 탄핵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이어 헌

법재판소가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이 192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명 투표로 진행된 계엄 해제 요구 안의 경우, 광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로,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리면 이탈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만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져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여당 의원 중 첫 번째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국민에 총부리를 겨누는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당이 국민적 신뢰를 잃고 바다까지 추락했던 경험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6인 체제 헌법재판소’ 변수

야당이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 되었으로 9명 중 6명만 구성돼 있는 것이 무엇보다 변수로 꼽힌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돼 있고, 탄핵 결정은 현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현재가 6인 체제가 됐을 경우엔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지금 시점에서 심리에 착수하지 않은 대통령 탄핵 결정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 못 헌법재판관 후보에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때문에 국회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한 뒤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사퇴 촉구 비상시국대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당정대 회동... 계엄 선포 수습방안 논의

한덕수·한동훈·추경호 등 참석 ‘내란죄’ 고발 대응책 논의한 듯

무위에 그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적인 국무위원의 거취는 이 회동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이번주에 표결할 예정이고,

야당이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 주요 담당자에 대해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당정대 회동을 마치고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 총리실은 추후 별도 브리핑 방안을 논의해 공지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앞서 오전 11시에 국무위원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 거취를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한편, 계엄 선포 직전 열린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에서는 19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에서는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으며 함구하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 확인을 꺼리는 것은 ‘내란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태홍 기자

“사전통보 못받아... 수십년 만에 한미동맹 시험대”

美·日·中 등 외신 반응 “중대한 우려 갖고 상황전개 주시”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한국과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자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외신들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와 함께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또,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임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에 앞서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데 계엄 조치에 관련 행정부 간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 및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중대한 우려를 갖고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국 내 자국민의 안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계엄령이 내려진 이후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지를 통해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대사관은 “재한 중국 공민(시민)에게 냉정을 유지하고 한국의 정세 변화를 주시하면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신중히 하며 공식 발표를 준수할 것을 알린다”고 전했다.

/*원승일 기자 won@

전문가들, 외투 유출 ‘외환위기’ 올수도

>> 1면 ‘풍랑만난 韓경제...’서 계속

이날 외국인인 유가증권시장에서 4078억원 어치를 팔았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392억원, 174억원을 순매수하며 추가 하락을 방어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낙폭도 확대됐다. LG에너지솔루션(-2.02%)·현대차(-2.56%)·KB금융(-5.73%)·NAVE

R(-3.11%)·신한지주(-6.56%)·하나금융지주(-6.67%) 등이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1998년 외환위기를 또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환위기는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 증시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국내에 유입된 외환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돼 국가의 외환이 부족하게 되는 위기상황

을 말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져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 증시자금은 빠질 수밖에 없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은 외국인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금이탈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에 두기보다 실물(현금)을 보유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